

번호이동 가입자 7년간 나눠먹기 공정위, 이통3사 '과징금 1140억'

SKT·KT·LG U+ 이동통신 3사
KAIT와 시장상황반 운영·담합
하루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
3000여건→200건 이내로 축소
"담합 적발로 통신비 완화 기대"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동통신 3사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40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이동통신 3사가 약 7년간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해 판매장려금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법으로 특정 통신사로 몰리지 않도록 담합하다 적발돼 1000억원 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11월 ~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액 1140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통3사가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받은 후, 법 준수를 위해 자율규제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시장상황반을 운영하며 담합이 이뤄졌다고 봤다.

공정위 조사결과, 상황반은 매일 이통3사와 KAIT 직원들이 모두 한 장소에 모여, 특정 이통사의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사례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위반 사항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는데, 이통3사 직원들이 2015년 11월경 각 시간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감 또는 순감

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

이후 상황반 운영이 종료된 2022년 9월 말까지 이통3사는 특정사업자에게 번호이동 순증감 또는 순감소가 편중되게 나타나는 경우 상호 간 합의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 조정을 실행했다. 구체적으로, 어느 한 이통사의 번호이동 순증 건수가 지속 증가하는 경우, 해당 이통사는 스스로 판매장려금을 낮추고, 순감이 발생한 다른 이통사는 판매장려금을 높였다.

문재호 카르텔조사국장은 "번호이동 순증감이 큰 이통사의 영업책임자가 순감소한 이통사의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를 한다거나, 순감소 이통사가 내부적인 사정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낮추는 등 담합을 유지·실행하는 상황이 진행됐다는 것이 상황반에 참여한 KAIT 직원의 업무기록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담합기간 동안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된 결과, 이통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2014년 3000여 건에 이르렀으나, 담합이 시작된 후인 2016년 200건 이내로 축소됐고,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는 2014년 2만8872건에서 2016년 1만5664건으로 45.7% 감소한데 이어 2022년에는 7210건으로 지속 감소했다.

문 국장은 "이 사건은 이통 3사 간에 7년여의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SKT가 426억 6200만원, KT 330억 2900만원, LGU+ 383억 3400만원이다. 과징금액은 번호이동 가입자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산정 기준 1%가 적용됐다. 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담합행위 과징금은 0.5%~20%까지 적용 가능하다.

문 국장은 "부과한 과징금이 적은 금액은 아니다"며 "이번 담합이 단통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규제 과정에서 진행됐고, 방통위 행정지도도 어느 정도 관여된 점을 고려해 산정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법인을 고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문 국장은 "단통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규제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홍문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이 지난 11일 '2025 도쿄 국제식품박람회' 행사장에 마련된 한국관을 둘러보고 있다. /aT

홍문표 aT 사장, 日서 K푸드 수출확대 점검

도쿄 국제식품박람회 한국관 방문
"수출상담회·현지화 지원 등 추진"

홍문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이 일본 도쿄를 방문해 한국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그는 '2025 도쿄 국제식품박람회'에 조성된 한국관도 찾았다. 12일 aT에 따르면 홍 사장은 지난 11일 일본에 진출한 한국 주요 수출기업 현지법인 대표들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일본 내 K-푸드 유통 동향과 업계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홍 사장은 "엔저 등 어려운 여건 속

에서도 K-푸드 수출확대를 위해 힘써 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 식품 영토 확장을 위해 aT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2025 도쿄 국제식품박람회 행사장에 마련된 한국관을 둘러봤다. 행사장에서는 일본 최대 유통기업인 이온리테일의 총괄 바이어를 만나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홍 사장은 "일본 소비자들 사이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한국 냉동식품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출상담회, 현지화 지원, 맞춤형 마케팅 등 다양한 수출 지원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위택스' 인정해야"

권익위, 경기 광명시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으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wetax)'를 인정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광명시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김 모씨는 광명시로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부과받고 위택스를 통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으나, 광명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해 뒤늦게 의견을 접수했다. 이후 광명시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과태료를 부과하긴 했으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으로 방문·우편·팩스만 인정하고 있었다.

권익위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는 서면(전자 문서)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고, 그 방식을 방문·우편·팩스로 특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권익위는 광명시에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으로 온라인 청구인 위택스도 포함하도록 하고, 행안부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해 뒤늦게 의견을 접수했다. 이후 광명시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과태료를 부과하긴 했으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으로 방문·우편·팩스만 인정하고 있었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수원-삼성물산, 해외 원전사업 개발 맞손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업무협약
아시아 태평양 사업개발 긴밀협력

한수원핵심역량과 삼성물산이 협력해 해외 원전 수출 시장 공략에 나선다. 한수원은 지난 11일 서울 한수원 방사선 보건원에서 삼성물산과 해외 원전사업 개발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비투비(B2B) 협력 활용 신규 원전사업 공동 제안 ▲대형원전 주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 협력 등 수요처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해외 신규 원전사업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원전사업 발굴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변화하는 글



황주호 한수원핵심역량사업장(왼쪽 3번째)과 오세철 삼성물산 사장(4번째)이 양사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 11일 서울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해외 원전사업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수원

로벌 사업 환경 속에서 삼성물산과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활용해 신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원전 사업관리 경험, 대형 인프라 사업수행 능력, 국제적인 네트워크 및 이해도를 갖춘 두 회사가 힘을 합친다면 더욱 경쟁력 있는 사업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철 삼성물산 사장은 "글로벌 원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에너지 정책과 수요에 맞춘 차별화된 사업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라며 "양사의 대형 원전 및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력과 글로벌 경험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해 혁신적인 시너지를 창출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폴리텍대, 호주 직업교육훈련기관과 MOU

한국폴리텍대학이 호주 최대 공립 직업교육훈련기관과 글로벌 기술인력 양성 협력을 강화한다.

폴리텍대학은 12일 호주 직업교육훈련기관인 TAFE NSW(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New South Wales)와 국제교류 네트워크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학생 및 교

직원 교류 ▲교직원 전문 역량개발 프로그램 운영 ▲직업교육과정 개발 ▲학술 교류 및 정보 교류 ▲공동 콘퍼런스 및 학술회의 협력 ▲기타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힘을 모은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교육기관 간 협력을 넘어 양국의 직업교육 정책 교류를 통해 미래 기술인재 양성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호주 총리 "美관세, 부당·비우호적"…보복 관세는 배제
▲美벤스, '트럼프 직격' 우크라이나 북부 사촌형에 공개 대응 /사진 뉴시스

▲2월 일본 기업물가 4.0%↑…"농산물 급등 여파 확산"
▲美 교육부 트럼프 행정명령 앞두고 인력 절반가량 감축

▲'미국 안보 분야서 중국 배터리 배제 법안' 美하원 통과
▲미국·우크라이나, 러-우 전쟁 30일 휴전안 합의… "공은 러시아로"